2026. 11. 18. Vol.409

ChungNam Report+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2차 공공기관 이전, 충남의 입지 논리와 지역발전 전략

오용준
충남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수석연구위원
yjuno@cni.re.kr

주요 내용

현황 및 문제 진단

-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의 2차 지방이전을 검토 중이며, 2026년 4분기 이전계획 확정과 2027년 선도이전 착수를 추진하고 있음
- 충남은 세종시 건설, 1차 공공기관 이전 제외, 국가 에너지 공급에 따른 구조적 부담을 감수해 왔으나 1차 이전의 낙후도 중심 형평성 기준으로는 이를 반영하기 어려움
- 따라서 국가전략 실행과 산업 연계에 유리한 입지적 효율성을 핵심 논거로 삼고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보상형 형평성을 보완 논거로 결합할 필요가 있음

기능군 입지 논리

- 충청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4개 기능군 유치전략을 전제로 기후·환경·에너지(15개 기관)와 국방(5개 기관) 기능군의 충남 입지 논리를 구체화함
- 산업네트워크 분석 결과, 기후·환경·에너지 부문은 3개 중심성 지표 모두 1위, 국방 부문은 모두 2위로 나타나 도내 산업과의 구조적 연계성이 확인됨
- 기후·환경·에너지 기능군은 고탄소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탈석탄 대응 현장에 인접하고, 국방 기능군은 논산·계룡의 국방 인프라 및 실증·제조기반과 연계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가짐

산업 연계 및 파급효과

- 기후·환경·에너지 기능군은 탄소규제 대응·에너지 전환 등 5대 전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해안 국가기간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기술 실증을 지원함
- 국방 기능군은 정책·연구, 교육·인재, 홍보·소통의 3대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논산·계룡 국방 인프라와 충남 제조업의 연계체계를 강화함
- 공공기관 사업비의 30%가 지역 내에 집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충남 지역 내 생산유발 4조 1,863억 원, 부가가치유발 1조 5,246억 원, 취업유발 13,069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지역발전전략

- 기후·환경·에너지 기능군은 충남혁신도시(내포)에 국방 기능군은 논산·계룡에 배치하여 각각 국가 산업전환과 국방산업의 특화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창출형(도시형), 지역문제 해결형(광역형), 메가시티형(초광역형)의 3개 지역발전모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혁신, 인재양성, 정주기반 확충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01

2차 공공기관 이전 동향과 1차 이전 기준

■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군 집적과 지역산업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26년 4분기 이전계획 확정 및 2027년 선도 이전 착수 추진(2026년 9월 현재),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른 이전 대상기관 선정 계획
- 공공기관 지방이전 예외기준 재검토를 통한 이전 대상기관 범위 확대 검토(「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 2차 이전에서는 개별 기관 유치의 필요성뿐 아니라 이전기관의 기능과 지역산업 간 연계성, 국가전략 실행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 혁신도시 중심의 기능적 연관 기관 집적 배치와 지역산업 및 대학, 5극 3특 성장전략 연계를 통한 지역 성장거점 육성
- 기관별 유치 희망 제시 방식에서 국가정책의 실행수요와 지역의 산업·연구·실증 기반을 결합한 기능군 중심 유치 전략으로의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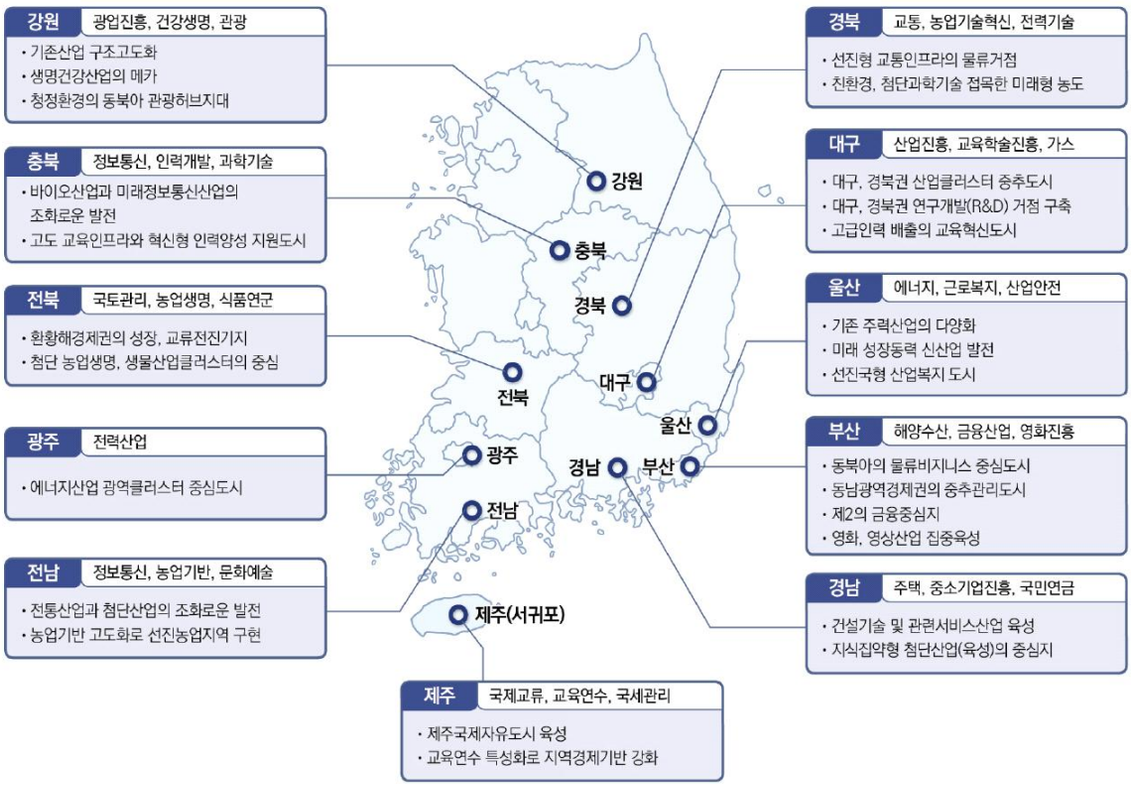
■ 2005년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핵심 배치원칙으로 적용하여 추진되었음

- (효율성) 이전대상 기관을 기능군별로 묶어 지역산업 특성과 연계 배치함으로써 기관 간 기능적 연계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음
- (형평성) 인구증가율, 1인당 GRDP, 재정자립도 등 지역 낙후도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 간 발전격차를 고려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낙후지역에 우선 배치하였음
- 2005년 5월 12개 시·도와 중앙-지방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여 수도권 345개 기관 중 175개 기관의 지방이전 결정

■ 충남은 세종시 건설에 따른 행정구역 편입과 1차 공공기관 이전 제외가 중첩되어 공공기관 배치 측면에서 다른 시·도와 구별되는 특수한 정책여건에 놓여 있음

- 1차 이전의 낙후도 중심 형평성 기준으로는 세종시 건설과 국가 에너지 공급에 따른 구조적 부담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2차 이전에서는 국가정책에 대한 기여와 부담을 고려한 판단기준 필요

〈그림 1〉 1기 혁신도시별 기능군 (2005년)



자료 : 건설교통부(2005), 국토교통부(2020)에서 재인용

02

기능군의 입지 타당성

■ 충남의 공공기관 유치 당위성은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구조적 부담을 고려하는 형평성과 국가전략 실행 및 산업 연계에 유리한 입지적 효율성을 결합하여 설정함

- (효율성) 국가전략 실행수요, 산업네트워크 중심성, 산업현장과의 인접성 및 기관 이전에 따른 기대 파급효과를 종합하여 기능군의 입지 타당성을 입증하는 주된 논거
- (형평성) 1차 이전 제외와 국가 에너지 공급과정에서 충남이 부담한 구조적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정책에 대한 기여와 부담을 기관 배치의 보완적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보완 논거
- (단계적 접근) 효율성을 기능군 선정과 입지 타당성의 주된 논거로 활용하고 형평성을 최종 배치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논거로 결합

■ 충청남도는 2026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에 4개 기능군(기후·환경·에너지,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을 공공기관 유치대상으로 제출하였으며, 본 고는 이를 전제로 기후·환경·에너지 및 국방 기능군의 유치논리를 구체화함

- (분석 대상) 기후·환경·에너지 기능군 15개 기관, 국방 기능군 5개 기관(경제·산업 기능군 14개 기관과 문화·체육·관광 기능군 13개 기관은 부록 수록)
- (검토기준) 국가정책과의 정합성, 1차 이전 배치원칙과의 일관성, 타 시·도와의 기능 분담 가능성

가. 형평성 :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구조적 부담의 보상

■ 충남은 세종시 건설과 국가 에너지 공급과정에서 구조적 부담을 감수한 지역으로 기존 낙후도 중심의 형평성을 넘어 국가정책에 대한 기여와 부담을 고려하는 '보상형 형평성' 측면에서 공공기관 배치 당위성을 보유함

- (세종시 건설에 따른 부담)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인구 13.7만 명과 토지 437.6㎢를 제공하였음에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되어, 국가정책에 대한 기여와 기회손실을 고려할 때 2차 이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형평성 근거 보유
- (국가 에너지 공급에 따른 부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9기(약 48%)가 입지하고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의 21.5%를 차지하는 충남은 환경적 부담과 산업전환 과제가 집중된 지역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실행할 기후·환경·에너지 공공기관의 배치 당위성 확보
- (환경·전력 부담) 2020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1억 4,444만 톤으로 전국 1위(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22년 41,048톤으로 2015년 이후 연속 전국 1위(김수향 외, 2024), 발전량 105,984GWh 중 53.2%의 도외 송출에 따른 전력자립도 213.6%(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지역의 구조적 부담을 공공기관 배치와 산업전환 지원으로 연결하는 해외 정책사례는 충남의 보상형 형평성 논리를 뒷받침함

- (해외 정책사례) 독일은 「구조강화법」(2020)에 따라 탈석탄지역에 최대 5,000개의 연방기관 일자리와 헬름홀츠급 대형 연구센터를 배치하였으며, 스페인은 「기후변화·에너지전환법」(2021)에 근거한 정의로운 전환 입찰을 통해 과거 석탄발전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망 접속 우선권 부여
- (충남 배치의 정당성) 충남은 국가 에너지 공급에 따른 구조적 부담과 고탄소 기간산업의 전환수요가 중첩된 지역으로 산업 연계성과 현장 인접성에 따른 입지적 효율성과 보상형 형평성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기후·환경·에너지 기능군의 높은 배치 당위성 확보

나. 효율성 : 핵심기능군의 산업 연계성과 국가전략 실행

■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산업전략의 기능적 공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산업전환과 국방산업 연계 기능 중심의 차별화된 유치논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고탄소 기간산업과 석탄화력발전의 전환수요, 논산·계룡의 국방 인프라, 충남 북부권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국가 산업전략의 실행기능 보완
- ① 산업네트워크 중심성을 통한 기능군의 구조적 연계성, ② 국가전략 실행수요와 산업현장 인접성, ③ 이전기관과 지역산업 간 기능적 연계, ④ 기관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종합 검토

① 산업네트워크 중심성을 통한 기능군의 구조적 연계성

■ 산업네트워크 분석(SNA) 결과 기후·환경·에너지 및 국방산업은 충남 산업거래망에서 중심성이 높아 산업간 파급효과 확산에 유리한 구조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후·환경·에너지 부문은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모두 1위, 국방 부문은 모두 2위로 도출
- (분석 범위) 기후·환경·에너지 부문은 OECD의 「환경재화 및 서비스산업」을 기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제정한 환경산업분류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77개 산업, 국방 부문은 충남 내 국방 관련 기업 166개 업체와 충남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84개 업체의 KSIC 코드에 해당하는 115개 산업으로 정의

| 기능군별 산업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결과 |

기능군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기후·환경·에너지	0.364 (1위)	0.517 (1위)	0.739 (1위)
국방	0.273 (2위)	0.443 (2위)	0.475 (2위)

주 : 연결중심성은 노드 간 직접 연결의 정도를 나타내며, 매개중심성은 산업 간 경로에서의 중재 역할을 말하며, 근접중심성은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의미

■ 이러한 분석결과는 두 부문이 단순히 생산규모가 큰 산업이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연결이 조밀하고 산업 간 거래 흐름을 중개하는 위치에 있는 산업네트워크의 핵심축에 해당함을 나타냄

- (산업적 연계) 기후·환경·에너지 부문은 도내 산업에 전력·원료를 공급하고 국방 부문은 여러 제조업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구조로 산업거래망의 중심에 위치
- (시사점) 두 부문은 상호 산업연관관계가 매우 강하므로 두 기능군의 공공기관이 함께 이전할 경우 시너지 효과 확대 가능
- (활용) 이전기관과 지역산업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구조적 근거로 활용하되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연관분석으로 별도 검토

② 국가전략 실행수요와 산업현장 인접성

■ 충남에 집중된 고탄소 기간산업과 석탄화력발전의 전환수요에 대응하여 국가 탄소중립정책을 산업현장에서 실행하는 기후·환경·에너지 기능군을 설정함

- (정책 시급성)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따른 철강산업의 대응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 등 국가 차원의 정책과제 집중
- (현장 인접성) 당진 철강, 대산 석유화학, 서해안 석탄화력발전 등 산업전환 수요가 높은 생산현장이 집적되어 있어 이전기관의 정책지원·기술개발·실증 기능을 직접 연계 가능
- (타 시·도와의 차별성) 철강·석유화학·자동차·디스플레이·반도체·화력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의 실물 현장과 이전기관의 정책·연구·인증·실증 기능을 직접 연계하는 전략으로 차별화
- (1차 이전과의 차별화) 1차 이전의 에너지 공급 기능 배치와 차별화하여 고탄소 제조업과 발전소 폐쇄지역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국가 산업전환 실행거점으로 특화

■ 기후·환경·에너지 기능군은 이전기관 고유기능과 지역산업 전환수요를 연계한 5대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서해안 국가기간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기술 실증을 지원할 수 있음

| 기후·환경·에너지 기능군 5대 전환 프로그램 |

전환 프로그램	연계 검토기관	주요 산업현장 및 연계기능
탄소규제 대응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당진 철강·대산 석유화학 : 탄소배출 관리, 철강 CBAM 대응, 저탄소 기술 실증·인증
에너지 전환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당진·보령·서천·태안 화력발전 지역 및 대산 석유화학 : 분산에너지, 수소·해상풍력 R&D, 청정연료 품질관리, 에너지복지
생태·물환경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장항제련소·보령댐·서산·당진 산업단지 : 오염지역 복원, 수문조사, 대체수자원 및 재이용기술 실증
산업전환·실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반도체·모빌리티 산업 및 홍성 국가산단 : AX 전환, 산업기술 R&D, 공급망 혁신·기술실증
미래모빌리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내포신도시 자율주행·보령·당진 수소도시·서해안 드론실증 기반 : 교통안전, 스마트건설, 드론·UAM 안전기술 시험·인증

③ 이전기관과 지역산업 간 기능적 연계

■ 국방 기능군은 논산·계룡의 기존 국방 인프라와 국가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연계하여 정책·연구·교육·실증·제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함

- (정책 정합성)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24.1.), 국방부의 방위산업 거점 육성 구상('25.12.),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선정('26.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능형센서 Spin-on 지원센터(계룡)('26.10.) 등 국방산업 육성기반 확대
- (현장 인접성) 계룡대 3군 본부, 국방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 관련 인프라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양대학교 등의 연계기반 보유
- (산업 연계성) '행정·연구(대전)–실증·생산(충남)–양산·수출(경남)'의 초광역 기능분담 구조에서 국방기술의 실증·생산 거점 역할 강화하고 충남 북부권의 금속·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 기반을 국방 분야의 부품·소재 공급, 민군겸용기술 개발과 시험·실증사업의 연계 가능

■ 국방 기능군은 정책·연구, 교육·인재, 홍보·소통의 3대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논산·계룡의 국방 인프라와 충남 제조업의 연계체계를 강화할 수 있음

| 국방 기능군 3대 혁신 프로그램 |

혁신 프로그램	연계 검토기관	주요 산업현장 및 연계기능
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정책 연구, 민군융합기술 개발, 신속획득 및 논산 국방산단 실증·사업화 지원
교육·인재	방위사업교육원, 국방전직교육원	방산 전문인력 교육·인증, 전역 장병의 방산기업 취업 및 지역정착 연계
홍보·소통	국방홍보원	계룡대·논산 육군훈련소와 연계한 국방정책 홍보, 국방 콘텐츠 제작·확산

④ 기관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기후·환경·에너지 및 국방 기능군 유치에 따른 충남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4조 1,863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5,246억 원, 취업유발 13,069명으로 추정됨

- (분석 방법) 이전 공공기관을 국가사업의 집행주체(Project Manager)로 보고 사업비 집행과 종사자 소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사업비 집행)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2026년 2개 기능군 사업예산 9조 8,141억 원 가운데 30%가 충남 소재 사업체에 집행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생산유발 3조 6,400억 원, 부가가치유발 1조 2,483억 원, 취업유발 8,618명으로 분석
- (종사자 소비) 이전기관 인건비에 1차 이전기관 가족동반이주율 71.0%(미혼·독신 포함)와 2025년 4분기 전국 가구 평균소비성향 69.2%를 적용한 결과 생산유발 5,463억 원, 부가가치유발 2,763억 원, 취업유발 4,451명으로 분석
- (전국 파급효과) 지역 간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전국 생산유발효과는 6조 1,35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조 3,028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1,597명으로 추정

| 기후·환경·에너지 및 국방 기능군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구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사업비 지역 내 집행	3조 6,400억 원	1조 2,483억 원	8,618명
이전 종사자 소비	5,463억 원	2,763억 원	4,451명
충남 지역 내 합계	4조 1,863억 원	1조 5,246억 원	13,069명
전국 파급효과(충남 포함)	6조 1,351억 원	2조 3,028억 원	21,597명

주 : 사업비의 지역 내 집행률 30%는 실제 집행실적이 아닌 분석 가정으로 기관별 사업 포트폴리오, 지역기업의 참여 가능성, 실제 이전 규모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03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지역발전전략

■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충남의 핵심 과제는 국가전략 수행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도내 산업현장과 연결하는 것으로 입지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보상형 형평성을 결합한 유치논리 정립이 필요함

■ 기후·환경·에너지 기능군 15개 기관은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에 집적하고, 국방 기능군 5개 기관은 논산·계룡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국가 산업전환과 국방산업의 특화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전기관의 고유사업을 도내 산업현장의 정책·연구·실증 수요와 연계하고, 지역기업의 국가 R&D·기술실증·사업화 참여 확대

■ 2개 기능군 20개 기관의 지역산업 기여 방식은 정책·규제 대응형, 기술 실증·인증형, R&D 기획·사업화형, 전환 현장 운영형, 인재·소통형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됨

- (정책·규제 대응형, 3개)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국방연구원의 정책 수립, 규제 대응 컨설팅,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현장의 제도 대응 지원
- (기술 실증·인증형, 7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의 현장 실증, 성능검증, 표준·인증을 통한 전환기술과 안전기술의 상용화 지원
- (R&D 기획·사업화형, 4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 기획·평가, 원천기술 개발, 사업화 연결을 통한 국가 R&D의 지역 산업현장 연계
- (전환 현장 운영형, 3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에너지재단의 분산에너지 체계 전환, 장항제련소 오염지역 복원, 탈석탄 지역 에너지복지 등 전환 대상 현장에서의 직접 사업 수행
- (인재·소통형, 3개) 방위사업교육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방홍보원의 방산 전문인력 양성, 전역 장병의 취업·정주 연계, 국방정책 홍보 및 콘텐츠 제작
- 기술 실증·인증형이 7개 기관으로 가장 많아 충남 산업현장을 이전기관의 실증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며, 정책 수립에서 기술개발·실증, 현장 운영, 인재 공급에 이르는 산업전환의 전 단계 지원 가능

■ 공공기관 이전효과를 혁신도시 내부에서 충남 전역과 초광역권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형, 지역문제 해결형, 메가시티형의 3개 지역발전모델을 제시함

① (일자리 창출형 : 도시형) 충남혁신도시에 기후·환경·에너지 기능군 공공기관과 연관기업·대학·연구기관을 집적하여 민간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학연 자족도시로 전환함

- (기업도시화) 지역 수요에 의존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전진기지 조성과 기능군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 유치에 따른 공공-민간 복합 고용 생태계 조성
- (5극3특 성장엔진) 서해안 국가기간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5극3특 성장엔진의 혁신거점 육성과 인력(대학)·규제·투자보조·R&D·창업·정주 패키지 지원, 라이즈사업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취업 촉진
- (AI 혁신도시) 자율주행·AI 미래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한 자율주행·스마트모빌리티 실증 거점 조성과 공공·상업·주거 전반에 AI 기반 교통·안전·환경 관리시스템을 갖춘 AI 모빌리티 중심 혁신도시 구현
- (일자리 정책) 권역 단위 자족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 1만 개 창출전략(계획입지 2,300천㎡ 소요)과 공공기관 유치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투자·출자회사 유치, 민간기업 연구센터와 대학·연구기관 간 산학협력 작동기제 마련을 통해 충남혁신도시를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혁신도시 정책의 대전환 유도

② (지역문제 해결형 : 광역형)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실증 기능을 충남 전역의 산업현장과 연계하여 고탄소 기간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석탄화력 폐쇄지역의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국가정책 실행거점으로 육성함

- (목표 및 이전효과) 탄소중립의 지역화를 선도하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화력발전 조기폐쇄 및 에너지 전환,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구현
- (추진전략) 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대체 친환경에너지원 공급을 위한 에너지 전환 주도형, 산업현장 탄소저감과 탄소감축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지원형, 탄소 흡수원 확대와 탄소중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구현형 공공기관 이전
- 탄소규제 대응·에너지 전환 등 5대 전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철강·석유화학의 저탄소화, 서해안 발전소 폐쇄지역의 에너지전환 및 신산업 실증사업 추진

③ (메가시티형 : 초광역형) 충남혁신도시를 5극3특 성장전략의 초광역 연계거점으로 육성하여 거점 간 기능분담과 국가 산업생태계의 광역적 연계를 강화함

- (국토 동서축 형성)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서해 관문 국제공항 건설을 기반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와 충남-전북 상생협력을 추진하여 수도권 중심 국토 경부축을 보완하는 국토 동서축 형성
- (초광역 국방 클러스터) 대전(행정·연구)-충남 논산·계룡(실증·생산, 중간 결절)-경남(양산·수출)의 기능분담 구조 속에서 국방기관 이전을 광역 생태계로 통합하여 5극3특 거점 간 기능분업 실현
- (광역교통망 연계)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SRT 유치, 충남내포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통한 혁신도시 성장효과의 주변 시·군 확산

〈그림 2〉 국토발전축 변화와 충청남도 메가시티 네트워크 도시체계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5,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04호)
국토교통부, 2020,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충남연구원, 2026, 충남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을 위한 핵심기능군 설정 및 유치전략(미발간 자료)

부록 : 기능군 설정 사유 및 기관별 이전 당위성

가. 기능군 설정 사유

■ 기후·환경·에너지 기능군(15개 기관)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지역에서 최대 감축지역으로 전환하여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탄소중립 허브 실현을 목표로 함

- (탄소규제 현장 대응) 국가 온실가스 직접배출의 21.5%, 전국 석탄화력 61기 중 29기를 부담해 온 고탄소 기간산업 집적지에 기후·환경·탄소중립 공공기관을 배치하여 CBAM 등 탄소규제 대응을 규제 대상 산업현장(당진 철강·대산 석유화학)에서 직접 수행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화력발전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경제·고용 충격에 대응하고 폐쇄부지·송변전설비를 활용한 재생·분산에너지 및 그리드 패리티 조기 달성 기반을 마련하여 에너지 전환 피해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
- (국가 탄소중립 거점 육성) 해양생태계 복원·연안습지 조성·산림 탄소흡수원 확대와 저탄소 생활환경 구현을 연계하여 충남의 산업전환이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필수조건이 되는 국가 탄소중립 거점으로 육성

■ 경제·산업 기능군(14개 기관)은 정부의 AI 대전환과 주력·국가기간산업 구조 고도화를 이끌 공공기관 입지를 통해 글로벌 경쟁거점(5극3특의 충청권 지방성장거점) 조성을 목표로 함

- (산업구조 전환 테스트베드) 국가기간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테스트베드이자 통합적 전환정책(산업, 에너지, 물류, 고용 등)의 적지
- (현장 기반 산업기술 혁신) 국가 주요산업(반도체, 모빌리티,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한 탄소중립과 AX 등 현장 기반의 산업기술 혁신과 신산업 창출
- (국가 리스크 관리거점) 글로벌 공급망과 관세 등 무역장벽 대응, 산업 관련 국가 안보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 리스크 관리거점의 역할 확대

■ 국방 기능군(5개 기관)은 국방 거점화를 통한 국방산업 시너지 극대화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함

- (국방 거점 기능 배치)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26.6.) 등 정부가 공식 인정한 국방산업 거점에 국방정책 연구·신속 획득·민군기술협력·방산 전문교육 기능을 군 지휘부·연구시설 인근에 배치하여 기관 간 협업 강화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기존 국방생태계 결합) 국방과학연구소(ADD), 계룡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국방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된 AI·유무인 체계 등 미래 국방기술의 실증·정책연구 기반을 마련하여 신규 인프라 조성이 아닌 기존 생태계에 연구·정책 기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완결성 확보
- (초광역 국방 기능분담) 산·학·연·관·군 연계를 통한 AI·무인체계·드론·로봇 등 첨단 국방기술의 실증·생산·사업화 기반을 확보하고 대전(행정·연구)-충남(실증·생산)-경남(양산·수출)의 초광역 기능분담 구조 속에서 국방혁신 및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

■ 문화·체육·관광 기능군(13개 기관)은 수도권 문화·체육·관광 수요를 분산하고 산업·에너지 중심 지역을 문화·체육·관광 융합형 산업생태계로 전환하는 국가 균형발전 모델 실현을 목표로 함

- (광역 관광콘텐츠 고도화)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충남의 역사·해양·생태·산업유산을 연계한 광역 관광콘텐츠를 고도화하고 수도권 집중형 여가·관광 수요를 서해안·내륙권으로 분산
- (사업 수행·인력 정주 여건) 충청권 초광역 대중교통망, 서해안 관광·휴양벨트, 내포·천안아산 권역 도시인프라와 연계하여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과 인력 정주에 유리한 여건 조성
- (지역협력 기반 이전효과 확산) 도내 대학, 연구기관,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및 관광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연구, 인력양성, 현장 실습·채용, 지역 기반 연구·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기관 이전효과를 지역 일자리와 생활문화 확산으로 연결

나. 기관별 이전 당위성

| 기후·환경·에너지 기능군 기관별 이전 당위성(15개 기관) |

기관명	이전 당위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화물차 등록 비중과 교통사고 치명률이 높아 교통안전·C-ITS 실증이 시급한 국토교통 R&D 실증 최적지 • 대덕(원천기술)-세종(정책지원)-충남(산업적 실증)을 잇는 초광역 국토교통 R&D 클러스터 핵심거점 조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내포 자율주행 시범지구(12.3㎞)의 순환버스 운행과 KAIST 모빌리티연구소 협력으로 미래 모빌리티 연구 활성화 • 도로교통·구조·스마트건설 등 연구분야를 내포혁신도시 확장지구 실증연구에 적용하여 지역 기술혁신 도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차세대 반도체·AI·로봇·신에너지 연구분야와 충남 연계, 홍성 국가산단·그린바이오벤처단지의 앵커 연구기관 역할 • 대덕의 기초·초격차 연구기반과 혁신도시 실증기반을 연계하여 대전 중심 R&D 생태계를 충청권 전역으로 확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제조업이 GRDP(생산액 기준)의 70%인 AX 전환 중심지로 산업대전환·공급망 구축·실증의 테스트베드 최적지 • 반도체·모빌리티·배터리 등 주력산업의 충청권 협력권 사업과 연계하여 국가 혁신 및 글로벌 R&D 실증 용이
한국상하수도협회	• 협회 인증 권한과 충남의 대체 수자원(담수화·재이용) 수요를 결합하여 국내 최대 대체 수자원 시장 선점 • 정수장·하수처리장·축산분뇨처리장을 활용한 물-에너지 넥서스 실증단지 확보와 물산업 중부권 거점화
한국석유관리원	•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대산)와 화력발전소 밀집지로 석유·대체연료 품질·유통관리의 현장 밀착 행정 가능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산단지의 SAF 실증·화이트바이오·CCU 등과 연계한 탄소저감·수소산업 거점 역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충남 서부권 물부족 현장에서 강우·지하수위 등 기초 데이터를 직접 생산·분석하고 수소 산업단지 물 공급망 구축 • 국가·지방하천, 간척지, 저수지가 집약된 실증 여건을 활용한 전 국토 하천 디지털 트윈 구현과 현장 중심 위상 강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정의로운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충남의 발전산업·석유화학산업을 연계할 에너지 전문기관 필요 • 중부권을 발전-산업-교육-교통이 연계된 에너지기술 집중 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 실현
한국에너지재단	•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인구소멸·경제위기 대응과 에너지 균등 복지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문기관 이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등 충남의 에너지 전환 사업과 연계한 국가 에너지 전환사업 보급기지 역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의 에너지 정보 집적 이점을 활용한 온실가스 정보망 구축과 국가 에너지 정보 주도 • 한국환경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공동 이전 시 시너지, 충남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경제성 창출
한국지역난방공사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입지 여건을 활용하여 국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보급사업의 효과적 이행 가능 • LNG 개질·수소 혼소·암모니아 발전 등 도내 발전시설 열원을 활용한 난방 보급과 에너지 효율 증대
한국환경공단	•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인구소멸·경제성 악화에 대응하여 탈석탄 지역의 공동화 방지와 활성화 도모 • 공단 핵심과제와 충남 현안(탄소중립, 대기환경 개선, 수자원 확보, 균형발전)이 부합하여 동반 성장 가능
한국환경보전원	• 서천 브라운필드 복원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여 국내 최초 '국가 생태복원 모델 제1호'의 완결성 확보 • 충남 기후환경교육원과 국가환경교육센터 기능을 결합한 국가 환경교육 표준 마련 및 허브 구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석탄화력 폐쇄 대안으로 업사이클링 클러스터·환경 전문인력 양성 기능을 현장에 이식하여 정의로운 전환 실현 • 다배출 산업군 대상 ESG 컨설팅, 공급망 탄소데이터 산정, 녹색채권·정책자금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
항공안전기술원	• 서해안권의 광범위한 공역과 서산공항·장항 항공 R&D 클러스터를 활용한 드론·UAM 실증 및 안전인증 효율화 • 수도권(서비스)-충청권(기술·인증)-경남권(제조) 국가 항공산업 벨트 구축, 기업의 인증기간·비용 절감

| 경제·산업 기능군 기관별 이전 당위성(14개 기관) |

기관명	이전 당위성
공영홈쇼핑	• '지역 상생협력관'·'지역 특화제품 판로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최적지 • 수도권 중심 공공 유통 구조를 완화하고 충청권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디지털 전환 거점 역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국토 중심 입지로 4개 지역본부·18개 지역검사소(46개 출장검사소)의 관리와 검사원 기술교육 효율 제고 • 배출가스·소음 검사, 전기·하이브리드 검사차량 보급 등 친환경 검사로 충남 탄소중립 클러스터와 연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무역수지 전국 1위(594억 달러 흑자)·수출 약 971억 달러(2025년)의 대표 수출 제조지역으로 지원 거점 상징성 • 현장 중심 무역 마케팅(코트라)과 정책금융(수출입은행)을 한 곳에서 수행하여 해외인프라 등 협업 효율 극대화
사회보장정보원	• 고령화율 22.3%(2024년), 일부 농어촌 40% 초과, 남부권 농촌 기초생활수급률 약 7% 등 복지 수요 대응 시급 • 석유화학·철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소득 변동에 대응한 취약계층 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실증 최적지
우체국금융개발원	• 2036년까지 화력발전소 14기 폐쇄로 생산 약 19조 원·고용 7,500여 명 감소 우려, 전환금융·포용금융 거점 필요 • 지방은행 부재와 시중은행 지점 중심 구조를 전국 우체국 금융 네트워크로 보완하는 공공 금융 허브 역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천안·아산·당진 등 북부권에 제조 중소기업 3만 개 이상 입지, 현장밀착형 중소·벤처기업 정책연구 최적지 • 중기부 인접으로 정책 유기성이 높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과 동시 이전 시 정책연구 협력 시너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제조업 대비 취약한 지식서비스 산업을 보완하고 기업데이터 활용 디지털 전환·데이터 인력 육성으로 AI 생태계 구축 • 모빌리티(자율주행)·반도체·디스플레이·RE100 산단 등 데이터 활용수요가 큰 산업 집적으로 실증·사업화 최적지
한국디자인진흥원	• 세종청사 인접·국토 중심 입지를 활용한 국가 디자인 정책 총괄과 제조업·산업디자인 연계 거점 기능 • 백제문화권 자원 활용 지역 특화 콘텐츠·관광브랜드 창출과 디자인 인프라 전국 확산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한국벤처투자	• 반도체 후공정·미래모빌리티·수소·바이오 등 전략산업과 모험자본을 결합하여 기술사업화–회수–재투자 선순환 •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심사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여 국가기간산업 현장의 제조업형 딥테크 창업 활성화
한국수출입은행	• 핵심광물·에너지 투자펀드, 공급망안정화기금, AI산업 지원 프로그램의 최대 수요처로 현장 밀착 금융 지원 필요 • 대규모 수출기업 집적에도 지역 본사 금융기관이 없어 발생하는 금융공백 해소와 산업자금의 역내 순환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고령화율 22.3%, 마을의 62.1%가 소멸위험권인 충남에 우편망 기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거점 필요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율(24.2%)·온라인몰 입점률(12.8%)이 전국 평균 대비 낮아 공공 유통·스마트 물류 기반 필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수도권 1시간 거리에 충청·전라권을 잇고 서해안으로 중국과 인접한 물류 허브, 비수도권으로 유통 혜택 확산 • 소부장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인삼·딸기·배·김 등 K-푸드 생산·수출 기반에 유통원의 판로 개척 전문성 결합
한국투자공사	•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실물경제와 글로벌 자본 운용 기능을 결합한 산업-금융 복합 클러스터 조성 • 제조·수출 중심 실물경제 기반 투자·리스크관리 모델의 현장 적용, 공공자산 운용 기능 분산으로 수도권 일극 해소
한국폴리텍대학	•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생산 거점과 수도권에 편중된 직업교육 기획 기능을 연계한 현장 맞춤형 인력 공급 • 내포혁신도시 중심으로 국가산단-충남도-기업-폴리텍 간 상시협력형 인력양성 거버넌스 구축

| 국방 기능군 기관별 이전 당위성(5개 기관) |

기관명	이전 당위성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 국방 R&D 조정허브(민군협력진흥원과 통합 추진)로서 계룡대·ADD·방산기업 근접 배치로 신속획득·민군협력 촉진 • 충남 북부권 제조업을 배후로 계룡(국방기획·연구)과 논산(생산·실증) 간 협업을 통한 국방 R&D 성과 확산
국방전직교육원	• 3군 본부·논산훈련소 등 군 인력 집적지 인근에서 전역 준비-교육-취업을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 • 연간 교육인원 약 15,000명 수준 운영 가능, 복무-전역-재취업-정주 연계와 국방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국방홍보원	• 국방정책 중심지(계룡·논산)와 홍보기관의 위치적 분리를 해소하여 국방정책 전달력과 현장성 강화 • 계룡대·육군훈련소·육군군수사령부와 연계한 국방문화·홍보·관광·교육 기능 집적과 국방미디어 허브 구축
방위사업교육원	•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따른 동반 이전으로 소요군·국방대·ADD와 인접한 방산정책 집행·인력양성 체계 구축 • 대전(R&D)-계룡(행정·교육)-논산(제조) 국방산업 삼각지대의 교육거점, 논산 국방산업단지 기업 맞춤형 교육
한국국방연구원	• 계룡대·국방대학교 등 국방기능이 밀집하고 산학연관군 협력체제가 구축된 충남 남부권에서 싱크탱크 역할 강화 • ADD(첨단기술)·국방대학교(정책이론)·KIDA(정책기획) 간 협업과 상호보완으로 미래 첨단기술의 정책적 실증 추진

| 문화·체육·관광 기능군 기관별 이전 당위성(13개 기관) |

기관명	이전 당위성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 조성·운용과 정책지원 중심 기관으로 수도권 상주 필요성이 낮아 전국 단위 행정 수행이 가능한 높은 이전 적합성 • 세종(문체부) 인접 행정 연계성과 체육기관 집적으로 충남혁신도시를 전국 체육정책 확산 허브로 육성
대한체육회	• 올림픽공원 내 60여 개 가맹단체의 동반 이전 가능성이 커 체육 거버넌스 전체의 구조적 분권 실현 • 학교·생활·엘리트체육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충남에서 지역 기반 체육정책 실험과 충청권 스포츠벨트 거점 구축
동북아역사재단	• 백제·내포·기호유교 문화와 석장리 유적부터 독립기념관까지 역사 현장이 밀집한 역사왜곡 대응 거점 최적지 • 천안(독립기념관)–공주·부여(백제유산)–내포(역사 연구기관)를 잇는 '역사·문화 골든 트라이앵글' 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백제문화권·기호유학 등 역사관광 자원이 풍부한 실증 현장에서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 정책연구 수행 • 세종(문체부)·대전(문화재청·통계청)과 1시간 이내 연계된 정책 클러스터, 충청광역연합 문화·관광 싱크탱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세종(문체부) 인접·수도권 1시간대 연계로 정책–교육–현장을 유지하며 '지역주도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 • 충남미술관('27)·충남 예술의전당('28) 등 내포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연수와 AI 디지털 교육 거점
한국문화진흥	• 내포 스포츠타운(2030년까지 276,714㎡, 2,509억 원 규모)과 연계하여 골프장 편중 수익구조 다각화·기금 확대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시설의 사후 활용을 위한 국제대회 유산 관리 모델과 스포츠관광 선도
한국방송공사	• 인구 210만 명임에도 도 단위 중 유일하게 KBS 본부급 거점 방송국이 없어 지역 미디어 공공성 확보 필요 •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와 연계한 UHD·실감형 콘텐츠, AI 기반 방송 등 차세대 방송기술 실증 기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지역 방송사 광고판매 지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여 지역 언론 재정 건전성과 여론 다양성 강화 •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거점과 연계한 디지털 사이니지·OOH 광고 협력, 충남-세종-대전 광고·마케팅 클러스터
한국언론진흥재단	• 뉴스 유통 지원·지역신문 육성 등을 수행하는 국가 미디어 진흥기관이 부재한 충남에 지역 언론 생태계 거점 필요 • 디스플레이 H/W 기반에 데이터 저널리즘·실감형 콘텐츠 등 S/W를 결합하고 디지털·AI 미디어 인력 양성
한국예술종합학교	• 주요 예술대학·문화 인프라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개편하여 지역 기반 예술인재 양성 체계 구축 • 세종(문체부) 인접, 내포의 행정·문화·주거 인프라로 대규모 캠퍼스와 구성원 정주여건 충족 가능
한국체육대학교	• 전국 단위 엘리트체육 인재 양성기관으로 특정 지역 집중 필요성이 낮아 체육 고등교육 지방분권 선례 마련 • 학사 운영 공백·이전 선례 부족 등을 고려하여 분교·연구센터 등 단계적·부분적 연계 모델 추진
한국체육산업개발	• 수도권 편중 스포츠산업의 지역 확산,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와 집적 시 정책–재정–운영 기능 간 시너지 • 올림픽공원 시설 관리 특성상 현장 대응력·수익성 리스크를 고려하여 기능 분산 형태로 추진
한국학중앙연구원	• 석장리 유적·백제문화·기호유교 등 역사문화유산 집적 현장에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등과 '한국학 연구벨트' 구축 • 충남 AI·데이터 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한국학 백과·실감형 콘텐츠 등 'AI 기반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고도화